

CH5. 여성주의 지정학과 북한인권: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담론 비판

발제자가 채용한 이 장을 관통하는 개념인 '제약된 행위성'과 탈북여성을 무력한 피해자로만 규정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발제문의 논지에 공감하는 바가 큼니다. 특히 본문(196p)과 발제자께서 제시한 거시적 국가 안보 지도가 지워버린 당사자들의 일상을 중심에 두는 '여성주의적 역지도화'의 필요성은 현 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낸 실천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발제자께서 토론 거리로 남겨둔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을 해보았습니다.

Q1. 탈북여성이 인신매매 경로를 생존전략으로 이용했다는 해석은 인신매매의 폭력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가?

탈북여성이 인신매매 경로를 생존전략으로 이용했다는 해석은 자칫 인신매매범의 책임을 희석하거나 강제결혼의 폭력성을 악화시킬 위험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약된 행위성'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는 결코 가해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극도의 굶주림, 정보 부족, 복송 위험, 그리고 폭력 속에서 이루어진 탈북여성의 극단적 선택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의 생존 투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탈북여성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국가 통제와 구조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더욱 선명하게 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2.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이 중국의 국경 단속과 강제송환을 강화하여 탈북자의 위험을 높였다는 본문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설득력 있는가? 이를 더 엄밀하게 검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이 오히려 중국의 국경 단속을 강화하여 현지 탈북여성의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은 지정학적 정황상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중국을 향해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 이는 순수한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본문에 제시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¹⁾처럼 인권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를 등급화하고 여러 분야의 제재를 가하는 순간, 인권 담론은 강력한 외교 전략으로 변모합니다. 경제, 통상 연계 제재나 UN 등의 외교 무대에서 실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국가의 소프트파워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본문 171쪽에 나와있듯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북한측의 기획 망명이나 국제사회의 규탄 활동은 단순히 난민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내정 간섭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인권 문제로 인한 외교적 압박의 빌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탈북자에 대한 강제 송환을 강력하게 집행하게 되며(choi, 2011), 결과적으로 인권을 위한 국제적 개입이 현지 탈북자들의 이동 공간을 축소하고 생존의 위협을 가중시키는 딜레마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 현상을 학술적으로 증명하려면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간 통제에 대한 명확한 시계열적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인신매매보고서와 같은 국제사회의 성명과 중국 내의 정책 선포를 연관지을 수 있는 정책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미국 국무부 산하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사무국이 자국법에 따라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인신매매 감시, 기소, 피해자 보호 노력 등을 평가해 등급을 책정하고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

Q3. 매매혼으로 형성된 가정이 동시에 억압의 공간이자 보호와 이동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성주의 지정학은 어떻게 개념화해야 하는가?

여성주의 지정학은 매매혼으로 형성된 가정이 지니는 양가성을 포착하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강요된 성적 역할과 돌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억압의 장소인 동시에, 탈북여성들이 남편과 마을의 관계망을 활용해 공안의 단속을 피하고 제3국으로의 재이주 비용을 마련하는 생존의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이해하고 개념을 확립해야만이 비로소 억압적인 조건 속에서도 협상하고 관계를 구축하며 이동성을 확보해 나가는 탈북여성의 주체적 생존 과정을 온전히 그려낼 수 있습니다.